



---

이슈브리프  
**ISSUE BRIEF**

---

발행일 : 2020년 2월 13일(목)

CONTENTS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IB 2020-02)

---

**CONTENTS**

- I.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 1
- II.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11
- III.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 18

---

발행인: 성동규

편집인: 이윤식

편집위원: 김창배,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행일: 2020년 2월 13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 Contents\_

금주(2월 3째주)에는 文정권 ‘국민기만’ Top 10 분석,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주거정책, 아동·청소년 정치인재 양성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국민기만’ 사례 10가지를 발굴·분석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주거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제3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참여 여건 확대 등 ‘정치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 제1편: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북한 비핵화 등 문 정권의 대한민국 자해적 정책들의 부작용은 차고도 넘침. 그런데도 반성과 성찰의 모습 없이 아집의 똥니만 부리고 있음. 어떻게든 국민을 기만해 나라야 어찌 되든 정권만 연장하면 된다는 생각뿐. 4·15총선은 국가존망을 건 건곤 일척의 승부처! ‘국민기만’ Top 10은 문 정권의 거짓과 기만을 낱알이 파헤치는 정권심판의 날 선 ‘검(劍)’이 되기를 기대함

## 제2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장경수 선임연구원)

현재 한국에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고령층과 청년층의 주택문제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령층의 소득 확보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세대상생형 전략형’ 주거정책을 마련할 필요. 즉, 고령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자산을 활용하여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제3편: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윤진 연세대 객원교수)

현재 청년 정치지도자의 등장은 전세계적 추세. 2017년 프랑스의 마크롱(39) 당선과 작년 핀란드의 산나 마린(34) 등장은 큰 화제.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이 메마른 한국에서 30대 지도자들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 특히, 同 현상을 우연으로 넘기기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이에 한국도 제반 시스템을 마련해 청소년의 정치참여 여건을 확대하는 등 “정치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축에 나서야 함.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CFC) 조성으로 정치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정치를 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며, △선거 때만 되면 인재영입이라는 일회성 ‘정치 쇼’를 반복할 게 아니라, 20년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아동·청소년 정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

# I.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작성: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kim.chang.bae@ydi.or.kr)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북한 비핵화 등 문 정권의 대한민국 자해적 정책들의 부작용은 차고도 넘침. 그런데도 반성과 성찰의 모습 없이 아집의 몽니만 부리고 있음. 어떻게든 국민을 기만해 나라야 어찌 되든 정권만 연장하면 된다는 생각뿐. 4.15총선은 국가존망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처! '국민기만' Top 10은 문 정권의 거짓과 기만을 날낱이 파헤치는 정권심판의 날 선 '검(劍)'이 되기를 기대함

## 1. 최저임금 인상은 90%의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2018.5.30.)

- 자영업자, 실업자를 제외하고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꼽수
  - 폐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실직한 수십만 명은 국민이 아닌가?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건 너무도 당연
- 아서 래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
  - ※ 아서 래퍼: 서울과 세수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래퍼곡선'을 제시
  -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2019.1.2)

## 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늘었으니 최저임금 잘못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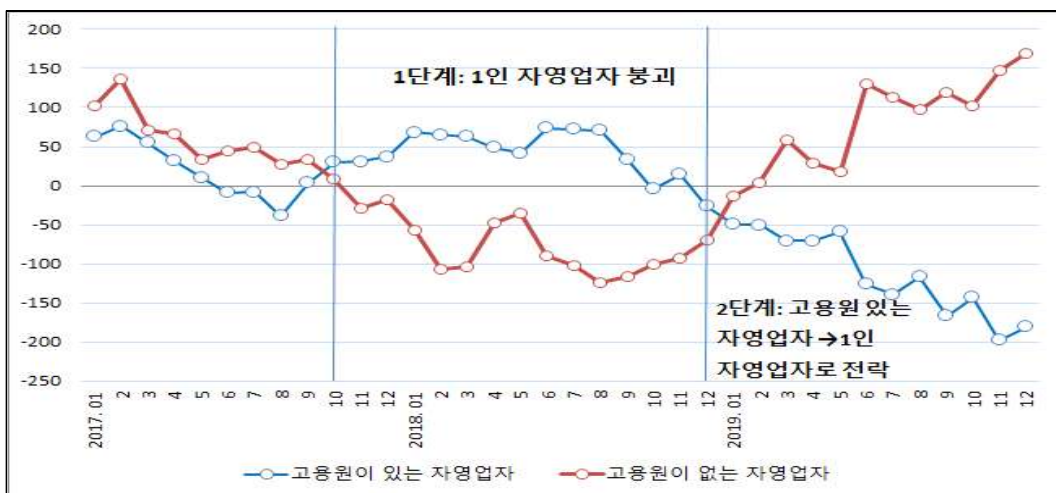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악화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018.8.22)

-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취약한 계층마저 무너진다는 당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것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으나 결국 수개월 만에 들통
  - 2018년 12월부터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감소하기 시작
    - 1단계: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먼저 붕괴
    - 2단계: 고용원을 줄이며 그나마 버티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있음

[그림 1-1] 1인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順으로 붕괴

(단위:천명)



### 3. 2019년 성장률이 점차 개선된다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2019.4.29)

#### ○ 회복될 것이라 장담했던 2019년 성장률은 2.0% 턱걸이

- 그나마도 민간 역동성 죽이고 세금으로 ‘분식(粉飾)성장’ 한 것
- 2019년 성장률에서 정부부문의 기여도(1.5%p)는 민간(0.5%p)을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슈퍼예산(전년비 9.5% 증가)을 통해 민간의 성장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약속은 기만적 구호였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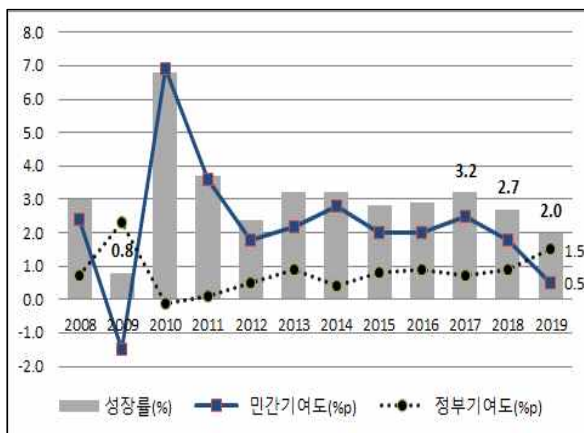
#### ○ OECD는 2019년 한국 명목성장률이 1.4%로 낮아져 OECD 36국 중 34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16위였던 순위가 문 정부 들어 2년만에 18계단 추락
- 극일, 반일 외치더니 성장률은 57년 만에 일본에도 추월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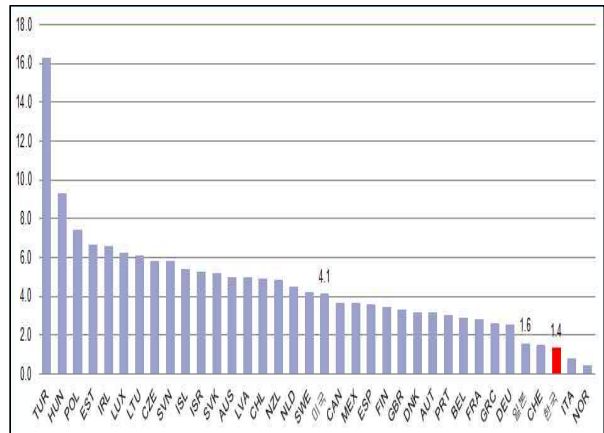
[그림 1-2] 2019년 성장률 2.0% 턱걸이, OECD 최하위 수준

(단위: %, %p)

성장률 2.0% 턱걸이, 그나마 세금주도성장



명목성장률, OECD 36국중 34위 최하위





## 4.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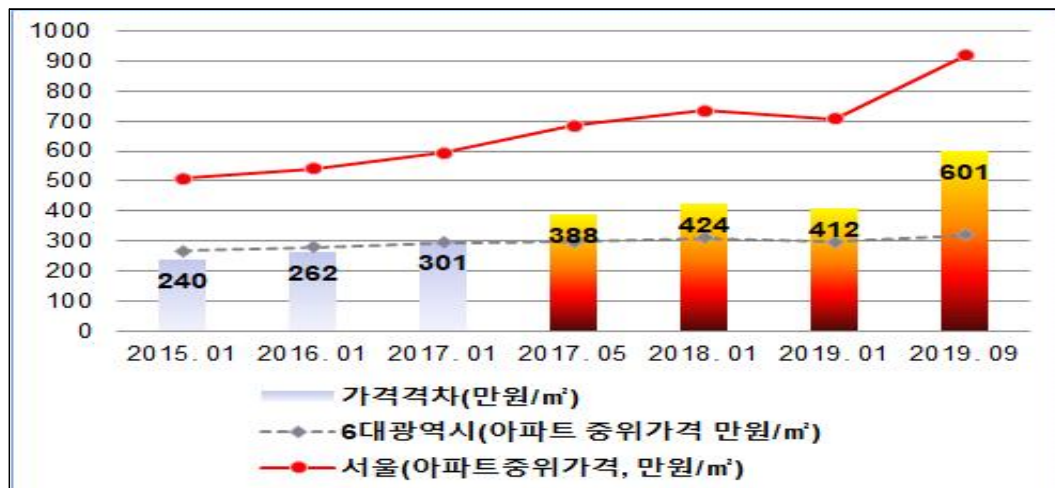
“현 정부 들어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문 대통령,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2019.11.19)

- 18차례에 걸친 무수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지만 효과는 잠시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반복
  - 일례로 2018년 9·13 대책 영향으로 서울 집값은 2018년 11월 이후 하락하는 듯 했으나 2019년 초여름부터 다시 급등
- 문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55% 급등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88만원/㎡에서 2019년 9월 601만원/㎡로 상승
  - ※ 아파트 중위가격: 전체 아파트를 매매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그림 1-3] 서울-6대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편차 확대

(단위: 만원/㎡)



## 5.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2위?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2위 실적, 5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FDI 동향’ 보도자료, 2020.1.6)

### ○ 일상화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통계 해석의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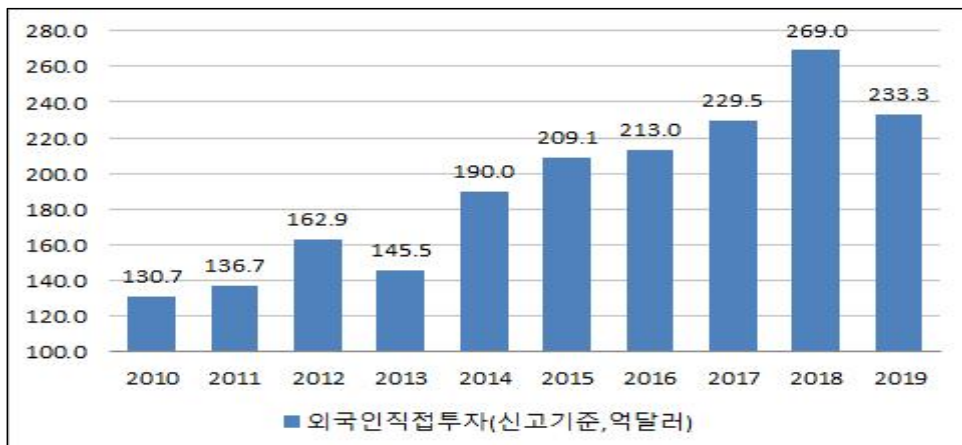
-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감소
  - 연간 233.3억달러(신고 기준)로 전년보다 13.3% 감소
- 하지만 정부는 ‘역대 2위’라고 말로 국민을 호도
  -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대폭 급감하지 않는다면 역대 2위가 당연
  - 고용률이 하락(2017년 60.8% → 2018년 60.7%)했을 때도 역대 2위라는 통계분칠을 내놓은 전력

### ○ 더구나 ‘해외투자로 나간 돈’이 ‘국내투자로 들어온 돈’의 5.5배

- 이는 ‘멀쩡한 기업’ 등 떠밀고 ‘오려는 기업’ 되돌렸기 때문
  - 2019년 1~3분기 중 해외직접투자는 419억달러로 전년동기비 14.6% 증가한 반면, 동기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도착기준)는 76억달러로 전년동기비 35.8% 감소

[그림 1-4] 외국인 직접투자, 2019년중 13.3% 감소

(단위: 억달러)



## 6. 고용 'V자형' 반등?

“작년 취업자,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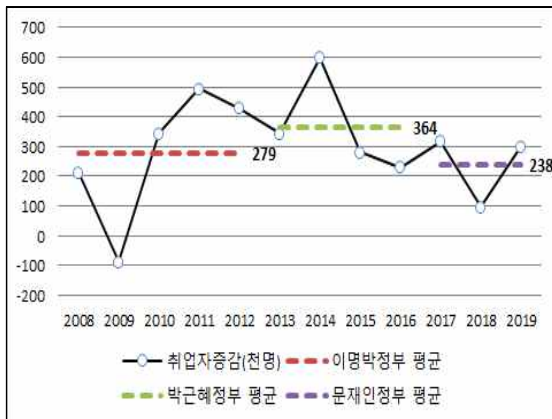
(홍남기 부총리,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 2020.1.15)

○ 2018년 고용참사에 대한 기저효과에 불과, 증가 추세는 오히려 약화된 상황

- 취업자 수 증가 폭, 문 정부 이후 매년 약 13만명 감소
  - 36.4만(13~16년 평균) → 23.8만(17~19년 평균)
- 고용률(15~64세) 증가세도 문 정부 들어 반토막
  - 증가폭: 0.4%p(12~16년 평균) → 0.2%p(17~19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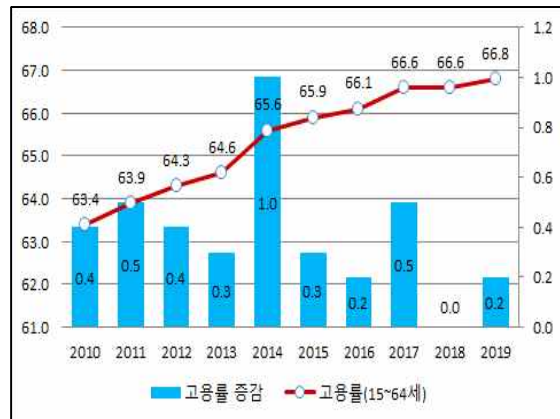
[그림 1-5] 취업자 증가 폭 둔화

(단위: 천명)



[그림 1-6] 고용률 증가 반토막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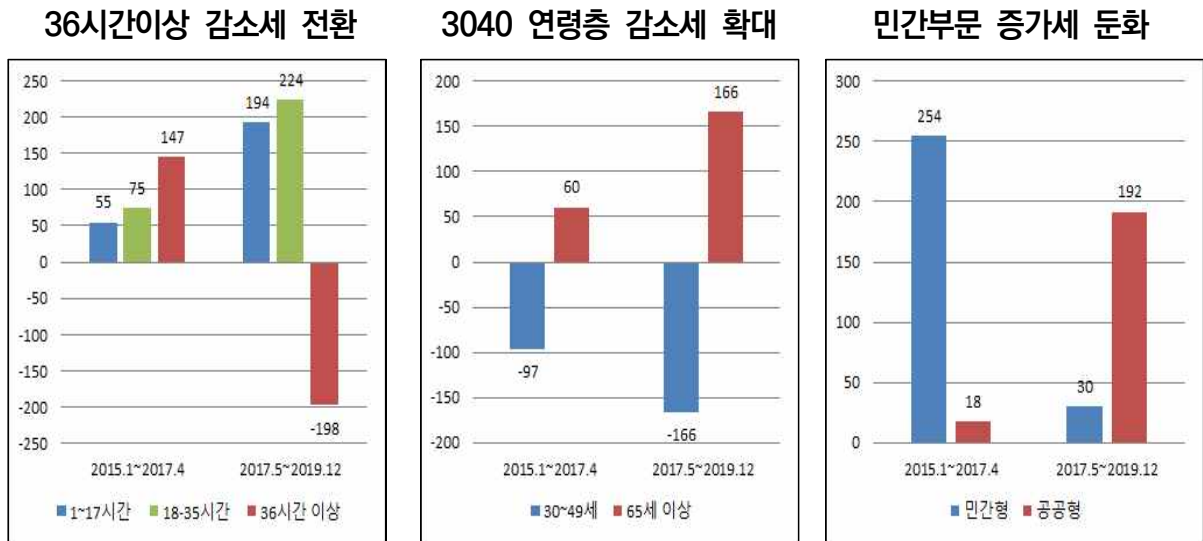
○ 그나마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단기 노인 ‘알바’형 일자리에 불과

- 문 정부 집권 후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는 급증

-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경제의 허리 30~40대 연령층의 취업 감소는 확대,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급증
  - 세금에 기여하는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금투입에 의존하는 공공형 일자리만 급증
- ※ 공공형 일자리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농림어업 + 보건업·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

[그림 1-7] 세금으로 만든 단기 노인 '알바'형 일자리 위주로 증가

(단위: 천명)



## 7. '소주성' 덕분에 저소득층(하위 20%)의 소득이 개선?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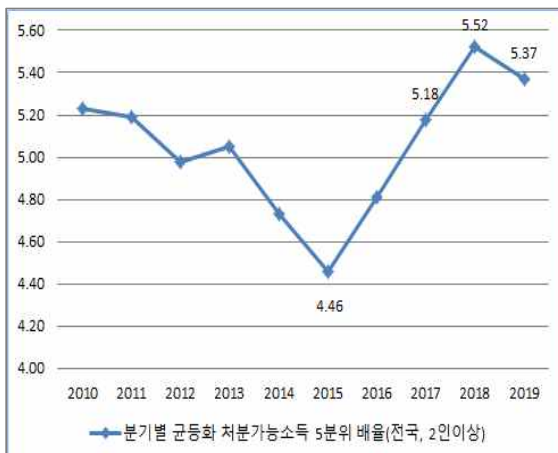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2020.1.20)

- 문 정부 들어 기록 경신을 거듭하던 소득격차가 고점에서 소폭 반락한 것에 불과
  - 2019년 소득5분위배율은 5.37배로 2010년 이후 최고치인 2018년 (5.52배)보다 겨우 0.15배 포인트 하락한 것임
    - 이전 정부 기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 1분위 소득 증가? 실상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배급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
  - 근로소득보다 정부가 지원한 이전소득이 큰 ‘배급경제’
    - 2019년 3분기의 경우,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약 44만8천원)보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이전소득(약 67만3천원)이 약 1.5배 많음

[그림 1-8] 여전히 큰 소득격차, 배급받는 처지로 전락한 저소득층

(단위: 배, 원)

2019년 소득격차 여전히 높아



하위20%, 근로소득 줄어 이전소득으로 지탱



## 8. 올해 수출이 회복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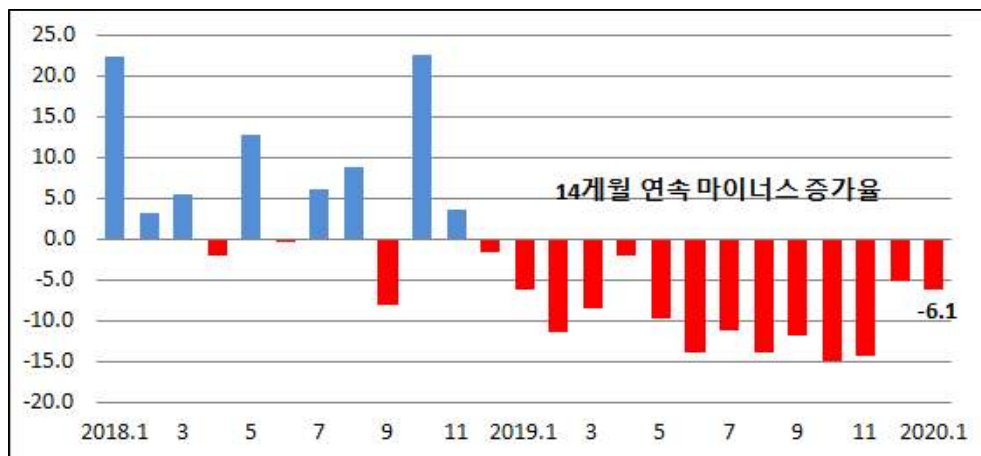
“새해 들어 경제 반등 징후… 연초부터 일평균 수출이 증가”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2020.1.20)

-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하더니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
  - 수출이 1월 1~10일 중 5.3% 증가하자 반등의 징후라며 자랑
  - 하지만 수보회의 다음날인 21일 관세청은 1월 1~20일 중 수출이 0.2% 감소했다고 발표
  - 결국 1월 전체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장기 부진인데 겨우 10일간의 통계가 좋아졌다고 ‘호들갑’을 떠낸 셈

[그림 1-9] 수출증가율,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단위: 전년동월비 %)



## 9. 탈원전 못하면 일본처럼 수천 명 사망?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

(문 대통령,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2017.6.19)

- 문 대통령, 일본 신문 잘못 인용, 피폭 사망자 한 명도 없어
  - 원전사고 이후 피난 중 건강이나 질병 악화로 죽은 사람이 1,368명이라고 보도한 도쿄(東京)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
    - 하지만 사인(死因)이 방사능 과다 피폭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음
- 日 외무성이 유감 표명하자 청와대는 착오였다고 해명
  - “후쿠시마 원전 관련 사망자라고 했어야 하는데 ‘관련’이란 글자가 빠지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다”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 10. 완전한 비핵화, 北 김정은과의 공동 목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2018.4.27)

- 북한은 2019년 12월 31일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비핵화 약속을 사실상 파기
  - 김정은은 “미국이 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
- 문 정권이 이러한 결과를 예상 못 했다면 무능의 극치이며 알고서도 굴욕적 구애와 퍼주기를 밀어붙였다면 대국민 사기 행위

## II.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jang.gyeong.su@ydi.or.kr)

현재 한국에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고령층과 청년층의 주택문제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령층의 소득 확보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세대상생형 전략형' 주거정책을 마련할 필요. 즉, 고령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자산을 활용하여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임

### 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주거 현주소

- 현재 한국에선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진행중
  - 가구분화에 따라 1-2인 소형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가구구조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초반부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은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 고령화가 더욱 급격히 진행될 것임<sup>1)</sup>
  - 2010년을 기점으로 주된 주택 수요계층인 35~54세 인구는 10만명씩 감소하고 있음
    -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구주연령 34세 이하 가구는 2000년 77.8만 가구에서 2030년 53.3만 가구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에 따라 청년층을 15~29세, 고령층을 55~79세로 분류함



- 이에 비해 55세 이상 고령층 가구는 2000년 73.8만 가구에서 2030년 225.1만 가구로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II-1〉 가구주 연령별 가구변화 추계

(단위: 천 가구)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34세 이하	778	740	693	675	641	619	533
35~54세	1,605	1,654	1,679	1,546	1,456	1,351	1,258
55세 이상	738	945	1,128	1,411	1,701	1,977	2,251
계	3,121	3,339	3,500	3,632	3,798	3,947	4,042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고령층 집값 불안감, 청년층 주거불안 심화 등 주택문제 상반

- 2018년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자가점유율이 75.7%이고,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7%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고령층은 과거 고성장시대에 주택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해왔으며, 저성장시대에 들어선 현재에는 주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만 주택가격의 유동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큼
  - 반면, 34세 이하 청년층은 임차비중이 86%에 달하며, 불안한 일자리로 인해 주택구매 능력과 의지가 낮고, 높은 주거비와 낮은 주거수준으로 인해 불만감이 큼

#### □ 이러한 가운데 세대별 소득 및 자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 과거에 비해 청년층은 교육비 및 재학기간의 증가, 경제력의 감소 등에 따라 주택임차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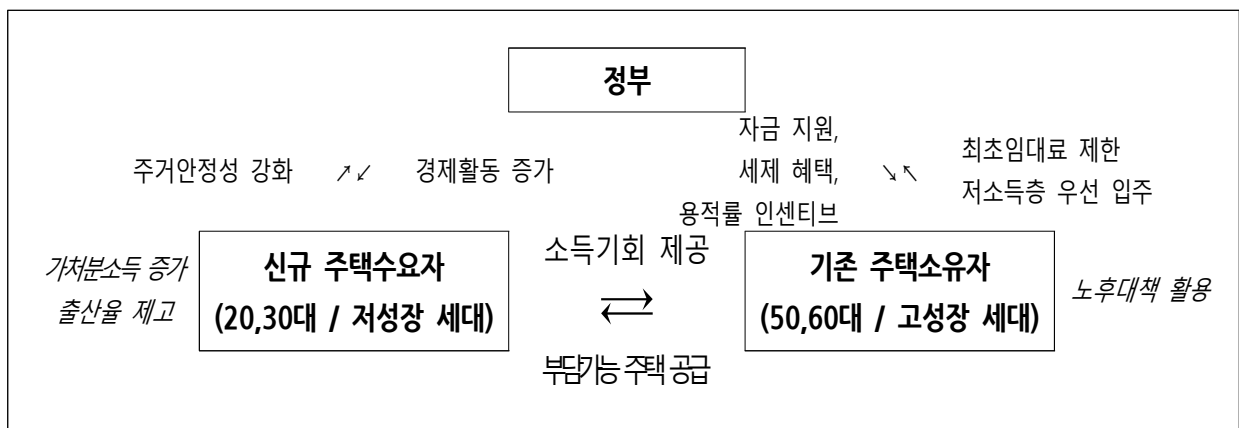
-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는 결혼·출산을 통한 인구성장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 고령층의 상당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채의존도가 높아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에도 소득의 감소, 연금의 부족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압력이 높아질 것임
- 최근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을 구입하여 보증금이 저렴한 소형주택을 월세로 내놓기 시작하면서 월세전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월세계약이 일반화될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정성도 위협할 수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음
  - 이처럼 경제가 저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층과 청년층의 주택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상 발생

## 2.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필요

- 고령층의 소득 확보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동시에 해결하는 '세대상생형' 전략이 필요
- 세대상생형 주거정책은 주택시장의 활력을 이용하여 수익성을 보장하되, 공공의 목표와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함

-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임대조건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 혜택과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 시켜야 함
-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은 고령층에게는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층에게는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부는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자금 및 보조금 지원, 저리 대출, 세제 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공공성이 확보된 부담가능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년층 신규 주택수요자 측면에서는 부담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근본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체계의 구축이 필요

[그림 II-1]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통한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기본방향



출처: 영국 주택·지역사회청 자료(National Affordable Housing Programme)

### 3.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제언

#### ① 역세권 토지 고도화로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서울의 경우 택지가 고갈되어 과거처럼 신규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도심 및 역세권의 주거기능 활성화가 미흡하여 도시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의 질적인 변화가 요구됨
  - 즉, 적극적인 역세권 활용을 통해 청년 주거안정을 촉진하고 도시기능을 현대화하며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
- 역세권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하되 역세권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의 특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하철역과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350m 내의 지역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sup>2)</sup>, 반경 350m 초과 ~ 500m에서는 소규모 증개축 및 개량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임대료 부담이 과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가 요망
  -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되,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토지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5~10년 정도의 한시적 정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2)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적률을 상향시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임

## ② 고령층 재고주택의 수선·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청년층 우선 임대

- 은퇴하는 베이비붐세대가 안정적인 월세소득을 얻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전망
  - 청년층 임차인의 측면에서도 주택의 수선·개량·리모델링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 세대친화적 주거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고, 증가된 주거공간은 청년 및 육아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필요가 있음
- 주택의 유효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에 한정된 수선·개량·리모델링을 모든 주택유형으로 확대하여 장수명화<sup>3)</sup>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
  - 재고주택의 유통 및 리모델링을 촉진하여 부담가능한 주택의 재고를 늘리는 동시에 수요자의 주거선택권을 넓히는 정책을 구사

## ③ 기존 중대형주택을 세대구분형 주택 공급으로 확대

-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서 신규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 따라서 기존 주택평면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고령층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중대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나누어 임대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함

3) 장수명화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수명을 늘림으로써 오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 4]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확대

- 역모기지론<sup>4)</sup> 확대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보장 강화 필요
  - 특히 주택연금의 경우 평균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있는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키워주고, 잠겨있는 자산을 유동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조적인 복지 확대 수단이자 소비 진작방안이 될 수 있음
- 나아가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기준을 현행 1주택 소유(부부)에서 2주택으로 완화할 필요
  - 현행 기준을 2주택으로 완화해 고령층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한하여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

---

4) 역모기지론의 기본 개념은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임.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임

### Ⅲ.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작성: 이윤진 연세대 객원교수 (leeyoonjin81@gmail.com)

현재 청년 정치지도자의 등장은 전세계적 추세. 2017년 프랑스의 마크롱(39) 당선과 작년 핀란드의 산나 마린(34) 등장은 큰 화제.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이 메마른 한국에서 30대 지도자들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 특히, 同 현상을 우연으로 넘기기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이에 한국도 제반 시스템을 마련해 청소년의 정치참여 여건을 확대하는 등 “정치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축에 나서야 함.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CFC) 조성으로 정치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정치를 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며, △선거 때만 되면 인재영입이라는 일회성 ‘정치 쇼’를 반복할 게 아니라, 20년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아동청소년 정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

#### 1. 30대 지도자의 등장은 세계적 추세

- 2019년 12월, 핀란드에서는 34세의 여성인 산나 마린(Sanna Marin)이 제46대 총리로 선출됨
  - ‘최연소 여성 총리’란 점에서 세계적 이슈가 됨은 물론, 취임 직후 19명 장관 중 여성을 12명 임명(30대, 4명)해 더욱 화제
  - 핀란드는 내각교체가 상당히 잦은 편이고, 의회가 지명한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야 함. 대통령의 권한은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된 상황이라 30대 총리의 권한이 커질 것임
- 우선, 핀란드의 사회적 여건에서 34세의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음

- 핀란드 청소년기본법 제8조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역사회의 청소년 단체 및 정책을 다루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
  - 또한 행정부와는 별도로 의회 역시 2003년부터 청소년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이며, 제도적으로 피선거권은 18세이고, 정당 가입은 만 15세에 가능
    - 즉, 핀란드에선 15세만 되면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완비되어 있다는 의미
  - 산나 마린 역시 2012년 시의원으로서 정치에 입문해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고, 의회 의장, 교통통신부 장관 등을 거쳐 총리로 임명되었기에 두터운 정치적 경력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정치적 여건뿐 아니라 놀이와 창의, 토론을 중시하는 핀란드의 교육제도 또한 어린 나이부터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핀란드는 2020년부터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이 아닌 유럽공동체, 언어, 경제, 역사 등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하여 놀이와 토론을 통해 각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즉,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의 미래와 공동체를 염두에 둔 통합적 교육이 목표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프랑스에서도 마크롱(Emmanuel Macron)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2017.5월, 25대)된 것도 우연히 발생한 사건은 아님
- 마크롱은 파리 정치대학과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한 공무원 출신으로 어린 나이부터 여러 국정 경험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



- 프랑스 역시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기부터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기회가 조성되어 있기에 가능
- 정리하면, 산나 마린(34)과 에마뉘엘 마크롱(당선시 39)의 공통점은 청소년기부터 전문적인 경험을 겸비한 '준비된 정치인'이라는 점
  - 양국의 공통점은 핀란드와 프랑스 모두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
  - 또한, 20대 초반부터 현실 정치에서 다양한 정치 경험과 무게감 있는 역할 수행을 통해 국정 경험을 쌓아 왔다는 점임

## 2.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

- 한국에서는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국 前 장관 사태를 전후해 청년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발해진 상황
  - 청년문제는 청년의 정치참여로 풀자는 것이 대세이긴 하나, 과연 누가 준비된 자이고, 누가 한국의 미래를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
- 20대 총선 당선자의 총선 당시 평균연령은 55.5세였고, 특히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300명 중 3명 1%에 불과
  -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한국 정치의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약 30%를 차지하는 2030세대를 대변하는 자들과 국회의원 간 '연령 비매칭'이 과연 정상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
  - 또한, △준비된 자들이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준비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등을 숙고해 봐야 할 시점

- 단순히 나이가 젊다고 모든 청년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사회적 여건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
  - ① 한국에는 어릴 때부터 사회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토양 조성이 되어 있는지?
  - ② 한국의 사회 제도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및 의견 개진 등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지?
  - ③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여건 등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 ④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경험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3.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한국의 청년 정치

- 유니세프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
  - 그중에서도 참여권(RIGHT TO PARTICIPATION)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즉,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의미
- 아동의 참여권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기본으로 하며, 이에 따라 사회의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됨

- 즉, 적절한 사회 활동에의 참여, 본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영역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 보장 등을 의미하며, 사회로부터 이러한 의견을 존중받아야 함

○ 최근 각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구성에 힘을 쏟고 있음

-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이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이때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을 의미하며, 아동의 참여는 내가 사는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함

- 직접 의회를 운영하며 의장과 의원을 선출하고, 투표를 통해 안건을 개선하는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권리를 의회를 통해 보장 받는 법, 나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등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됨

- 당초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시작한 것이나 진행을 하면서 아동들이 성장하는 모습,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는 모습,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 등을 보게 됨

- 이에 단지 친화도시 인증으로서가 아닌 아동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

○ 한편, 정치 선진국에서도 아동친화도시 구성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실시 중

-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구성의 일환으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이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도, 본래 목적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함은 아니었음
  - 즉, 아동청소년 의회 운영은 일찌감치 시작되었으며 아동이 개인적, 사회적 의견을 개진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회시스템 및 교육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정치 선진국 역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지 및 효과의 긍정적 확산 등은 한국보다 두텁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아동의 정치참여 역량 증진과 준비는 “선거만 끝나면 국민은 노예가 된다”는 루소의 언급을 넘어설 방책이 될 수 있음
  - 선거 공약 중 가장 돋보이는 분야에 아동은 늘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야 할 것임
- 특히, 한국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의 정치참여가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를 곧바로 청년 정치의 당위성으로 설명하기엔 부족
  - 즉, 청년 정치의 시작은 아동기부터 사회적 참여권에 대한 보장,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직접적 의견 개진 및 여건 조성, 아동기부터 생활속 정치에 대한 간접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임

#### 4. 2040년, 준비된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의 미래 정치’를 설계하자

- 준비되지 않은 청년 정치는 돌이킬 수 없는 독약임을 기억해야 함
  -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준비 없는 미래는 한국 정치의 미래에 재앙으로 작용

- 한국 사회의 긍정적 미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도(正道)의 권리 및 정치교육이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
  - 미래에 대한 대비는 과학기술 개발 및 미래 먹거리 개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생활 속 정치참여, 사회 참여 보장 등을 통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현 한국의 상황에선 제2의 마크롱이나 산나 마린은 요행껏,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님
  - 이제는 좌우를 떠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지며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교육이 필요한 시대
    -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올바른 가치관 주입보다 올바르게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대
  - 특히,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시민 양성, 정치적 현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치 전문가 양성”이 시급
    - 정치인은 ‘종합예술의 능력’을 겸비하여야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문직”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야 함
- 자유한국당은 아동청소년의 정치참여 보장 및 아동 대상 교육이 좌우 및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함
  -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주변에의 관심이 단지 의문에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여부가 결정지을 것임
  -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성은 무조건적인 본인 권리 향상에 대한 주장에

앞서 △지역사회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아동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 조성, △어릴 때부터 사회 참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형성 등을 바탕으로 함

- 이러한 기본 여건이 바탕이 될 때 한순간 마법처럼 등장했다 모래처럼 사라지는 청년 정치 세력이 아닌 준비된 청년 정치, 준비된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집단이 성장 가능

○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준비된 청년 정치인 양성의 적극적인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임

- ‘인재영입이라는 선거철 고정프로’를 여당과 동시에 방영할 게 아니라,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면밀히 세워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전문적 정치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현재 정부와 여당보다 앞장서서 아동기부터의 정치참여 교육과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보수의 미래 비전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당에 제안 하니,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 바로알기 ‘자유민주시민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전문직으로서의 정치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정치 학교’ 운영

- 각 지자체 단위 ‘정치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부와 여당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한 ‘아동청소년 경제학교’ 운영 등을 제안



##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順, 2018.8.9~現在)

###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펄스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9)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유튜브 '슈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 (현안보고) 베트남 미북회담 '노딜': 원인, 평가, 전망

###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 (현안보고)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 쟁점과 대책

###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 (현안보고)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패(必敗) 경고음"

### 이슈브리프 2019-02 (발간일: 2019.1.24)

▶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이슈브리프 2019-01** (발간일: 2019.1.10)

- ▶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의 전환 ▶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 ▶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 (현안보고)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대응

**이슈브리프 2018-24** (발간일: 2018.12.20)

- ▶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시사점 ▶ 2018 유럽연합(EU) 청소년 정책 방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AI)과 정치인의 미래
- ▶ (현안보고)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분석 결과

**이슈브리프 2018-23** (발간일: 2018.12.6)

- ▶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들 ▶ 왜 미국 중간선거에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 ▶ (현안보고) 자유한국 i노믹스(inomics) 해설

**이슈브리프 2018-22** (발간일: 2018.11.22)

- ▶ 미세먼지 피해는 커지는데 대책은 제자리걸음 ▶ 해외 주요 방송사의 현황 및 시사점 ▶ 성 혐오 갈등 사태로 본 건강한 토론장의 필요성 ▶ (현안보고)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과 그 시사점 ▶ (현안보고) 정부·여당의 사립유치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브리프 2018-21** (발간일: 2018.11.8)

- ▶ 경제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 자유한국당의 선거전문가정당화를 위한 모색 ▶ 남북합의 비준 논란 관련 핵심 쟁점 및 평가 ▶ (현안보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사태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8-20** (발간일: 2018.10.25)

- ▶ 고용세습으로 드러난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 ▶ 새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그린벨트 地價마저 올리는 부동산대책 ▶ (현안보고)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

**이슈브리프 2018-19** (발간일: 2018.10.11)

- ▶ 충격적 일자리 재난사태의 해법 ▶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이슈브리프 2018-18** (발간일: 2018.9.13)

- ▶ 포퓰리즘 국가의 결말 ▶ ASU 사례로 본 학습혁명의 효과와 시사점 ▶ 최악의 고용지표가 선순환 체질변화? : 장하성 정책실장 기자간담회(8.26)에 대한 비평 ▶ ‘편가르기 식 보유세 강화’ 꿈수 논리

**이슈브리프 2018-17** (발간일: 2018.8.30)

- ▶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분석 결과 ▶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 평가, 전망 ▶ 유튜브의 국내 통신망사용 문제점 및 개선안 ▶ 외국인 근로자 130만 시대, 현황과 대책

**이슈브리프 2018-16** (발간일: 2018.8.23)

- ▶ 韓電 대규모 적자, 국민혈세 낭비하는 脫원전 ▶ 녹조 악화시킨 4대강 보 개방의 역설 ▶ 관세청의 北석탄 국내 밀반입 조사: 평가와 전망 ▶ 고등교육 혁신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이슈브리프 2018-15** (발간일: 2018.8.9)

- ▶ 소득주도 성장론: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한 부실공사 ▶ 문제 많은 전기요금제, 전기료 폭탄 맞는 소비자 ▶ 文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문제점





---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